

## 2018년 군무원(2018.8.11)

### 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 역할을 방향잡기(steering)로 인식한다.
- ②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 존재가 아닌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계층제의 완화 및 탈관료제를 강조한다.
- ④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 2 정책네트워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관료, 학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을 정책공동체라 한다.
- ② 정책커튼모형은 정부기구 내의 권력 장악자들에 의해 정책과정이 독점되는 가장 폐쇄적인 유형으로 Yishai가 주장하였다.
- ③ 이슈망은 유동적이며 불안정적인 일시적인 망으로 특정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정책네트워크가 네거티브섬 게임(negative-sum game)을 하는 반면 이슈네트워크는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을 한다.

### 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Cobb의 정책의제설정모형은?

정부기관 내에서 제기되거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외부집단의 주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공식의제가 되도록 충분한 압력(설득·로비)을 가한다.

- ① 내부접근형    ② 외부주도형    ③ 동원형    ④ 굳히기형

### 4 신엘리트이론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무의사결정은 정책결정자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에 발생한다.
- ②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며, 정책과정 전반에서도 나타난다.
- ③ 권력계층의 기득권을 침해할 경우 등장하기도 한다.
- ④ 다원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엘리트주의의 일환이다.

### 5 목표의 변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표의 전환은 조직의 항구성 형성에 기여한다.
- ② 본래의 목표에 동종 목표의 추가는 목표의 확대를 가져온다.
- ③ 복수목표 간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목표의 비중변동이다.
- ④ 유형목표의 추구는 목표의 전환을 야기할 수 있다.

### 6 다음 중 거래비용경제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거래의 내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계서제 조직이 출현한다.
- ② 거래비용경제학은 조직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즉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자와 부하, 공급자와 생산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분석하여 조직현상을 연구한다.
- ③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및 조직 간의 거래를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 ④ Williamson은 조직 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U형(unitary : 단순)에서 M형(Multi - divisionalized : 다차원적) 관리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 7 다음 중 수평적 조정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규칙    ② 통합관리자    ③ 태스크포스    ④ 정보시스템

### 8 다음 중 정부조직의 보조기관이 아닌 것은?

- ① 계장    ② 차관    ③ 실장    ④ 차관보

### 9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지향한다.
- ② 정보와 지식의 교환·공유·축적으로 조직 학습을 촉진시키며, 새로운 지식이나 가치의 창조·활용이 용이하다.
- ③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 ④ 통합관리가 어려워 감시비용이 많이 든다.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 ② 공기업은 시장형, 준시장형으로 나뉜다.
- ③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으로 나뉜다.
- ④ 공공기관 지정은 국무총리가 한다.

### 11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 실적주의는 직위분류제 확립에 기여하였다.
- ㉡ 직위분류제는 일반행정가 양성에 기여한다.
- ㉢ 업관주의는 관료제 내 민주화에 기여한다.
- ㉣ 업관주의는 현재 민주주의에서 쓰이지 않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1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 ② 소외집단이나 소수집단의 공직취임자리를 박탈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 ③ 공무원들이 출신집단별로 구성되어 집단이기주의를 감소시킨다.
- ④ 지역별, 성별 임용할당제(쿼터제)는 헌법상의 평등원리에 어긋나며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문제가 있어 도입하기가 곤란하다.

### 13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로부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직접 영입할 수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다.
- ②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③ 공직의 유동성을 높여 관료주의화 및 공직사회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
-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



#### 14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 : 1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 ② 직급 :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
- ③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책임과 곤란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 ④ 직류 : 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 15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 ② 계급제는 직위분류제보다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더 유리하다.
- ③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을 제약한다.
- ④ 계급제는 인사관리자의 높은 리더십 구현에 기여한다.

#### 16 「공무원임용령」상 보직관리의 기준에 중 직위의 직무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위의 성과책임                      ② 직렬 및 직류
- ③ 직무수행의 난이도                  ④ 직무수행요건

#### 17 「국가공무원법」상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닌 것은?

- ① 행정부 - 인사혁신처장
- ② 국회 - 국회사무총장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④ 법원 - 대법원장

#### 18 국가공무원법 상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수 없다.

#### 19 스미스(H. D. Smith)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보고의 원칙                          ② 명확성의 원칙
- ③ 행정부책임의 원칙                  ④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 20 예산과 계획의 성향 및 관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예산은 보수적, 계획은 쇄신적 성격을 가진다.
- ② 계획담당자는 미래지향적·발전지향적·소비지향적이나, 예산담당자는 보수적·부정적·저축지향적이다.
- ③ 계획담당자는 단기적 관점을, 예산담당자는 장기적 관점을 가진다.
- ④ 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통합이 결여될 경우 기획과 예산은 분리된다.

#### 21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22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신축성 유지방안이 아닌 것은?

- ① 예산의 배정·재배정                  ② 총괄예산
- ③ 긴급배정                              ④ 추가경정예산

#### 23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태적 접근방법에서는 행정인의 가치관·태도·신념을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행정개혁을 도모한다.
- ② 구조적 접근에서는 통솔범위의 원리·명령통일의 원리·계층제의 원리·조정 원리 등을 강조한다.
- ③ 현대행정에서 가장 타당한 행정개혁의 방안은 구조, 관리기술, 인간 등의 종합적 영역에 관심을 갖고 이의 상호융합을 시도한 접근방법이다.
- ④ 구조적 접근이란 주로 과학적 관리기법에 근거하여 업무수행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관리기술의 개선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 2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들 수 있다.
-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
- ③ 우리나라는 절충적 방안으로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④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 25 지방자치법 상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감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 의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의 취소·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 2018년 군무원 행정학 해설

1 답④ ④ (×) '규제 강화' ⇨ '규제 완화'

2 답③ ② (○) • 다양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비교

| 구 분              | 참여자 수   | 주된 참여자 종류            | 응집성·의존성 | 배제성     | 관계의 지속성 |
|------------------|---------|----------------------|---------|---------|---------|
| Policy Curtain   | 외부참여 없음 | 정부부처                 | ·       | 매우 높음   | ·       |
| Iron Duet        | 매우 제한적  | 정부부처, 관련 전문가집단       | 높음      | 높음      | 높음      |
| Iron Triangles   | 제한적     | 정부부처, 의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 높음      | 높음      | 높음      |
| Policy Community | 비교적 제한적 | 정부부처, 약간의 관련된 집단들    | 높음      | 보통      | 보통      |
| Issue Networks   | 제한 없음   | 정부부처, 다수 관심있는 집단들    | 낮음      | 낮음(개방적) | 낮음(유동적) |

④ (×) 출제자는 정책네트워크와 이슈네트워크를 구별하여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양자를 구별할 경우 정책네트워크는 하위정부(철의 삼각)로 행위자 간 관계는 협력·의존관계로 positive sum game(정합게임)의 성격을 지닌다. 이슈네트워크는 행위자 간 관계는 경쟁·갈등관계로 zero sum game 또는 negative sum game의 성격을 지닌다. 정책네트워크에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까지 포함시키는 일반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④는 틀린 지문이다.

3 답① 내부접근형은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부기관 내의 관리집단이나 상당한 전문지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기관 외부의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여 최고결정자에게 긴밀하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 의제화하는 경우이다.

4 답① ① (×)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潜在的)·현재적(顯在的) 도전을 억압·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으로 정치체제 내의 특정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영향력의 행사를 시도조차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과정이다(Frey). 의도적으로 문제를 기각·방치시켜 결과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도 나타나지만, 정책결정자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정책의제화를 저지하려는 의도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④ (○) 바흐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R. Dahl의 다원주의가 권력의 한쪽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치권력의 두 얼굴'을 제시하며 주장한 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이론에 해당한다.

5 답① ① (×) 목표의 승계(succession)는 조직 목표가 달성되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목표가 없어진 경우 조직의 정당성이 상실되어 조직을 폐지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조직 존립의 정당성을 얻고, 조직을 항구적으로 존속하게 하는 동태적 보수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② (○) 목표 확대(expansion)는 목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상향조정하는 목표의 양적 변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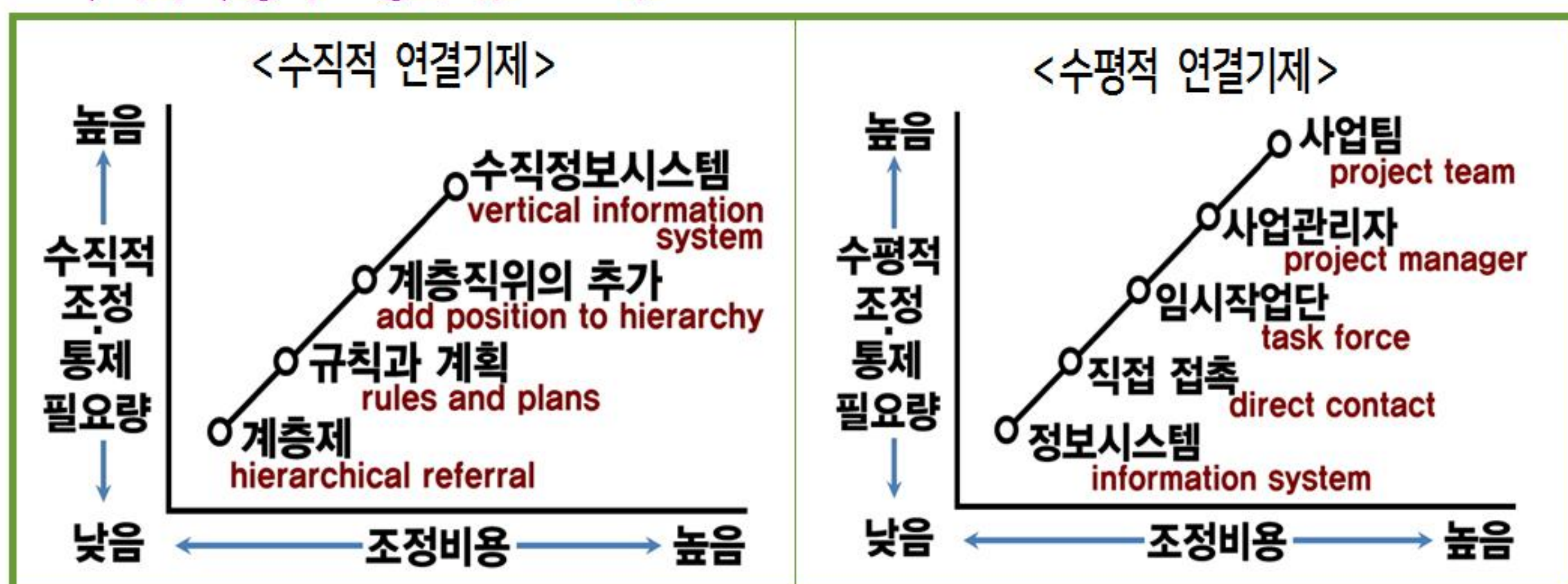
④ (○) 무형목표(상위목표)의 추상적·개괄적 성격으로 인해 상반된 해석이 있고,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현실감 있고 명확하며 측정가능한 유형목표(하위목표)에 치중할 경우 무형목표를 경시함으로써 목표의 전환(displacement)을 초래할 수 있다.

6 답① ①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계적 조직을 형성한다고 보므로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이를 줄이기 위하여 위계조직의 설립이 증가한다고 본다. 시장을 통한 계약관계의 형성 및 집행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계층제적 조직이 될 경우의 내부관리비용(관료제적 조정비용)을 비교하여 거래비용이 내부관리비용보다 많은 경우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내부화), 즉 계층제적 조직이 형성된다고 본다.

└ 시장에서의 거래비용 > 관료제 내부조정비용 ⇨ 조직통합이 효율적(거래의 내부화, 수직적 통합, 계층제 형성)  
└ 시장에서의 거래비용 < 관료제 내부조정비용 ⇨ 시장거래가 효율적(거래의 외부화) (㉠ contracting-out)

7 답① ①은 수직적 조정기제. ②③④는 수평적 조정기제. 통합관리자는 project manager, 사업관리자, 전임통합자 등으로도 불림

■ 수직적·수평적 조정기제(R. Daft)



8 답④ 차관·차장·실장·국장·과장·계장은 계선조직으로 보조기관이다(단 계장은 현재 과장의 보조기관으로 공식적인 법정 보조기관은 아님). 차관보는 막료(참모)조직으로 보조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조 기관  
계선  
행정기관의 의사나 판단의 결정·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 정부조직법 2조 3항·4항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보조 기관  
막료  
①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함.  
② 명칭은 정책관·기획관·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음.  
■ 차관보 : 행정 각부에는 차관보를 둘 수 있음(필수기관이 아님). 차관보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함. 차관보 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음.  
\* 차관보는 보좌기관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참모조직으로서의 기능은 유사함

9 답⑥ ① (○) 구성원의 활동은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통합된다. 활발한 상호작용과 정보공유를 통해 수직적 통합(계층 축소)과 수평적 통합(경계최소화)이 이뤄지며 지리적 분산의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공간적 통합을 추구한다.

③ (×) 네트워크 조직은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에 대한 직접적 감독·통제가 곤란하다. 외부기관과의 느슨한 연계로 인해 구성단위 간 신뢰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감시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계약 불이행 등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 확보가 곤란하다.

10 답④ ④ (×)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각 호 생략)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유형

| 공기업(50명 이상)                                                                                                                  |                 | 준정부기관(50명 이상)                                                                           |                       | 기타 공공기관              |
|------------------------------------------------------------------------------------------------------------------------------|-----------------|-----------------------------------------------------------------------------------------|-----------------------|----------------------|
| 공공기관 중 시장성이 큰 기관으로 정부가 자체수입 비율·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공기업으로 지정한 기관<br>자체수입비율(자체수입액/총수입액)이 50% 이상인 기관(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이라도 업무특성상 지정 곤란시는 예외) |                 | 공공기관 중 시장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으로 정부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br>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지정(자체수입비율이 50% 미만인 기관) |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 시장형                                                                                                                          | 준시장형            | 기금관리형                                                                                   | 위탁집행형                 |                      |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85%) 이상인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

11 답② ④ (×)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이 양성에 기여한다.

㉠ (×) 오늘날 업관주의적 임용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2 답① ① (○) 행정관료의 재량권 확대에 의해 입법·정책결정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통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료의 책임회피, 공익보다 관료이익이나 특수이익 추구로 인해 행정책임의 확보가 곤란하다. 따라서, 대표관료제를 통해 관료조직을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고루 충원하여,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충분히 검토되고 상호견제하면서 보다 국민 뜻에 부합되는 행정을 실현하는 내부 통제가 가능해진다.

② (×) 소외집단이나 소수집단의 공직취임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한다.

③ (×) 적극적 대표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정부관료제 내의 각 관리집단들이 자신들의 출신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할 경우에는 집단이기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

④ (×) 헌법상 평등원리는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임용할당제가 수평적 평등을 저해하여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는 있지만 현재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차별인 경우 수직적 평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헌법상 평등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양성채용목표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저소득층 임용할당 등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13 답④ ④ (×) 국민의 요구에 민감한 외부인사가 조직을 장악하므로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강화된다.

14 답④ ④는 직군이다.

■ 직위분류제의 구조

| 직위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최소단위 ㉠ 00실장, 00국장, 00과장                                                                                                                                                                                                          |
|----|-------------------------------------------------------------------------------------------------------------------------------------------------------------------------------------------------------------------------------------------------------------|
|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 일반행정직류, 법무행정직류, 재정직류 등                                                                                                                                                                                                        |
|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책임도·곤란도가 상이한 직무의 군 ㉠ 행정직렬, 세무직렬                                                                                                                                                                                                                |
|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최대 단위 ㉠ 행정직군·기술직군·관리운영직군<br>(동일 직렬 내에서) 직무의 종류·책임도와 곤란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 행정서기보,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등. 수평적인 등급과 수직적인 직렬이 교차하는 공통부분.<br>동일한 직급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됨.                                                                                 |
| 직급 | (직렬과 직군을 초월하여) 직무의 종류·성질은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br>• 직무등급 : 우리나라는 등급은 없고 실정법상 계급으로 표현했으나,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도 「직무등급」 개념이 도입되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규정. 고위공무원단과 외무공무원은 직무등급이 적용되며 더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승격'이라 한다. |

15 답① ① (×) 공무원 신분인 특정 직위나 직무와 관련되므로 조직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직무 자체가 없어지면 다른 직무를 맡거나 다른 직렬로 이동이 곤란하여 퇴직해야 하므로 신분보장을 저해하고 행정의 안정성이 약화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불리하다.



- ④ (○) 계급제는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전직·전보가 용이하며 승진의 폭이 넓어 인사관리(인력활용)의 탄력성·융통성·신축성이 크다. 관리자 입장에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인사권자의 재량이 커지며 리더십 발휘가 용이하다.

■ 인사권자의 리더십

- ㉠ 폐쇄형보다 개방형의 경우 인사권자의 리더십·영향력이 더 큼 : 폐쇄형은 인사기준으로 경력(연공서열)이 강조되므로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약함. 개방형은 임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어 인사권자의 리더십·영향력이 큼.
- ㉡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인사권자의 리더십이 더 큼 : 인사권자는 조직의 직무와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면 조직 구성원에 대한 리더십을 행사할 필요가 없음. 또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인사권자의 권한은 작아짐.

- 16 답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1·2항)

|           |                                                                      |
|-----------|----------------------------------------------------------------------|
| 직위의 직무요건  | ①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② 직위의 성과책임, ③ 직무수행의 난이도, ④ 직무수행요건                     |
| 공무원의 인적요건 | ① 직렬 및 직류, ② 윤리의식 및 청렴도, ③ 보유 역량의 수준, ④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⑤ 그 밖의 특기사항 |

- 17 답④ •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한다.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 18 답④ ① 제57조. ② 제63조. ③ 제60조. ④ (×) 제62조 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9 답② ■ 예산원칙의 분류

|                   |                                                             |     |     |     |     |      |          |
|-------------------|-------------------------------------------------------------|-----|-----|-----|-----|------|----------|
| 선델슨(W. Sundelson) | 완전성, 엄밀성, 명료성, 공개성, 단년성                                     | 단일성 | 명세성 | 배타성 | ·   | ·    | 전통적 예산원칙 |
| 노이마르크(F. Neumark) | 완전성, 엄밀성, 명료성, 공개성, 한정성                                     | ·   | ·   | ·   | 통일성 | 사전의결 |          |
| 스미스(H. Smith)     | 완전성, 엄밀성, 명료성, 공개성, 한정성                                     | ·   | 명세성 | ·   | 통일성 | 사전의결 | 현대적 예산원칙 |
|                   | 행정부책임, 예산기구 상호교류, 보고, 다원적 절차, 적절 수단 구비, 시기신속성, 행정부재량, 행정부계획 |     |     |     |     |      |          |

- 20 답③ ③ 예산담당자는 단기적 관점을, 계획담당자는 장기적 관점을 가진다.

- 21 답③ •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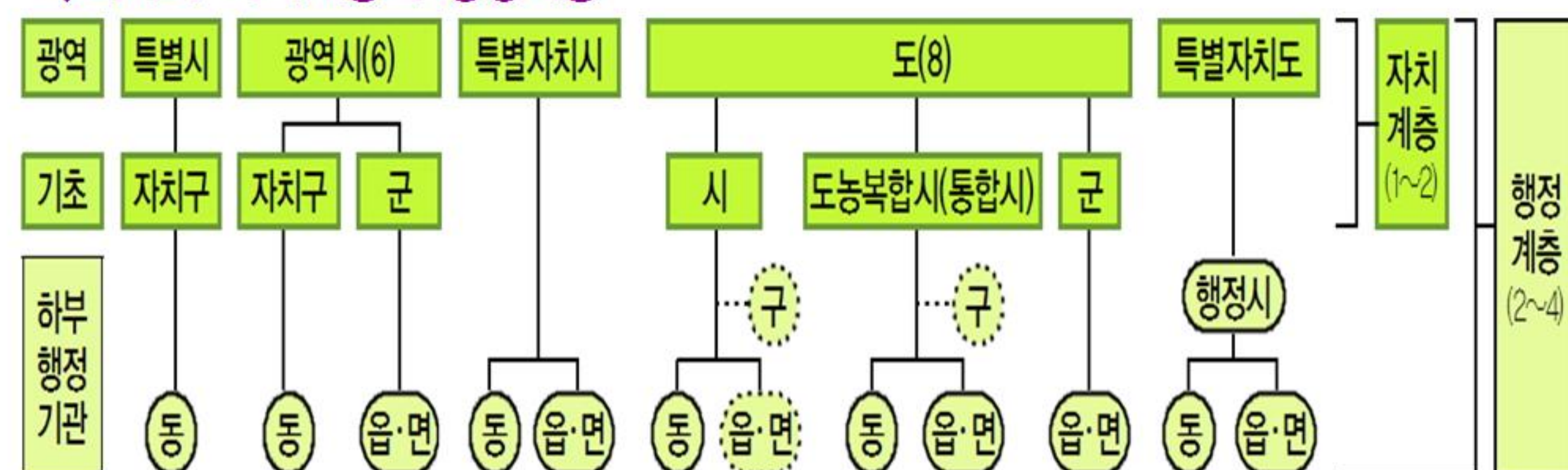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함)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22 답① ① (×) 예산의 배정·재배정은 예산집행과정의 재정통제 수단이다.

- 23 답④ ④ (×) 과학적 관리기법에 근거하여 업무수행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관리기술의 개선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은 관리기술적 접근이다.

- 24 답② 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1~2계층이며 행정계층은 자치계층까지 포괄되며 2~4계층이다(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질 경우에는 행정계층에 포함됨).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계층은 1층제, 행정계층은 2층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은 1층제, 행정계층은 3층제이다.

• 우리나라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 25 답② '시·도'는 광역자치단체를,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을 의미한다.

- ① (○) • 제169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 ② (×)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제169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 제170조 1항. ④ (○) 제171조 1항